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의 기본방향

조광(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차례>

들어가는 말

1. 동학적 평등성의 계승
2. 농민적 건강성의 계승
3. 혁명적 실천력의 계승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일어났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이다. 117년 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4세대 이전 즉 우리들의 증조부나 고조부 때의 일이며, 여기에 있는 누구도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학농민혁명이란 사건을 사회적 유전(遺傳)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고, 117년 전 여기에 참여했던 혁명가들의 정신에서 역사적 교훈을 통한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17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다. 이때 우리가 겪은 변화 내지 발전은 과거 수천 년 간 우리민족이 겪어왔던 변화/발전상보다 더 중요하고 큰 충격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우리는 전근대사회를 청산하고 근대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독립운동, 민족해방과 남북분단을 겪었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형태로 민족이 경험했던 가장 처참한 전쟁을 경험했다.

전쟁으로 인해 남북의 분단은 굳어졌고, 남북의 문제는 독재와 민주라는 대항 구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는 유일하게 근대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한 근대화와 민주화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다. 우리 앞에는 근대적 가치의 완성과 민족의 화해를 통한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17년 전에 겪었던 동학농민혁명이란 사건과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민족사의 길은 모두다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미래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개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지금 우리에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과거’의 사건, 그 혁명에 대한 ‘현재’의 기억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교훈을 되살려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미래’의 새로운 역사가 놓여 있다. 이 일련의 역사과정에서 유의미(有意味)한 작위(作爲)를 통해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을 기억하는 우리는 동학농민혁명발생 2주갑(周甲)을 눈앞에 두고 있다. 2년 후인 2014년이면 동학농민혁명 봉기 120주년이 된다는 말이다. 생각해 보건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있어서 100여년이란 시간은 최근 100여년이란 시간의 의미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과거의 100년이란 시간과 오늘날의 100이란 시간은 그 양적(量的), 물리적(物理的)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의 질적(質的), 가치적(價值的)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같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눈앞에 둔 오늘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변했는지를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현대에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과거의 사회와 더 큰 차이를 드러낸다는 말이 된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시간의 질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변화는 발전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일어난 변화를 되보가 아닌 발전과정의 일부로 삼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간의 작위적(作爲的)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고양시켜, 새로운 시대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사건 자체에 대한 객관적이며 엄정한 연구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 보아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에는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혜안은 특출한 한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결정된 다기 보다는 일종의 집단지성이 획득할 수 있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서로 모여 의론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공동 모색을 전개하게 된다. 여기에서 본고는 일단 동학과 농민과 혁명의 차원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계승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동참해 보고자 한다.

1. 동학적 평등성의 계승

종교로서의 동학에는 여러 사상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 동학사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주목되는 사례로는 그 사회사상 특히 신분평등론을 들 수 있다. 신분제도의 존속여부는 전근대 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신분제의 원칙이 사회 각 부문에 걸쳐 관철되고 있었다. 반면에 근대사회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는 신분제도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신분제에 대한 도전과 배경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학과 같은 개혁의 사상에서는 신분제 부정의 논리가 선명히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개항기의 사회에서도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하던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항기 동학농민군의 사회사상 가운데 신분평등론은 많은 농민의 호응을 얻으며, 혁명의 전개에도 기여한 바 컸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동학사상에서 등장하는 신분개혁 사상의 배경에는 새로운 우주관 내지는 신관의 출현을 들 수 있다. 흔히 말하기를 신관과 인간관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우리는 새로운 신관이나 우주관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인간관의 출현을 예시해주는 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최제우는 ‘천심즉인심론’(天心卽人心論)을 전개한 바 있다(『東經大全』, 『論學文』). 이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의 표현으로 해석되며, 모든 인간을 하늘의 위치로 들어 올린 인간존중의 사상이었다.

한편 최시형(崔時亨)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강조했다(吳知泳, 1940. 『東學史』, 41쪽). 이는 최제우보다도 더 직설화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존귀함을 하늘에 비견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시형은 경천(敬天)과 경인(敬人) 나아가서는 경물(敬物)까지도 주장했다(『天道敎創建史』, 17-8 쪽). 그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 모두가 존엄하다는 입장의 표명을 통해서 인간 존엄성을 필연의 이치로 확립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교리의 연장선상에서 최제우와 최시형 등은 인간 평등성의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다. 우리는 최제우가 가지고 있던 신분 평등의 관념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용담유사』 「교훈가」)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 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용담유사』 「교훈가」)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제우는 빈천한 사람들에게 부귀를 약속함으로써 신분의 해방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지 일단 동학에 입도하면 곧 양반인 군자(君子)가 되고 도통한 신선(神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분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시형(崔時亨)의 경우에도 신분 평등을 위한 주장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는 인간에게는 귀천이 없고, 인간 모두는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해주었다(『天道敎書』, 제2편 해월신사 포덕 6년). 그리고 그는 부인이나 어린이까지도 평등한 인간임을 강조했다(崔時亨, 「內修道文」).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들은 평등을 실천하고 있었다(金九, 『白凡逸志』, 서울 : 범우사, 32쪽). 그리하여 동학이 전파되어 가던 1860년대의 양반사회에서나, 1890년대 농민운동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양반층은 농민군이 반상(班常)을 무시하는 일에 분개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1863년 상주 圖南 院生들의 예를 들 수 있다.

생각해 보건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 당시 신분평등론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근대사상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개항기 개화사상가들도 거의가 동의하던 부분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가들은 개화사상가들과 동일하게 시대의 요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인간존엄성의 강조를 통해서 근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고, 신분제 폐지를 종교의 언어로 표현했다. 이는 당시 사회가 그만큼 성장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리고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신분제는 제도적으로 철폐되고, 사회관습적으로 약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신분제 폐지론에는 이와 같이 개화사상과 동학사상 양자 사이에 일치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신분제 폐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나 협동작업의 전개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신분제 폐지론에 있어서 양자(兩者)는 일치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각자의 입장에서 별개로 진행된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신분제 개혁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개화사상과 동학사상 사이에 그 지향의 일치점은 찾을 수 없으며, 그 관철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찾게 된다. 신분제 폐지론은 인간평등이라는 근대적 진리를 일깨워주는 노력이었다. 요즈음은 기본인권으로 평등권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동학의 인권론은 자연법적 인권에 대한 서양의 논리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동학사상 자체 내에는 천부인권론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즉, 동학은 인간평등에 대한 각성, 인권 내지 인간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는 가르침이기도 했다.

생각해 보건대, 인간기본권의 존중은 근대국가(近代國家)에서나 탈근대국가(脫近代國家)에서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고 신장(伸張)되어 가는 인권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오늘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새롭게 발견된 인권은 이른바 고향권(故鄉權: 자신이 태어난 고향, 조상의 연고가 있는 곳에서 살 권리)에 대한 개념의 출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계층이동을 저지하는 각종 장치들이 새롭게 교묘히 마련되어 인간 불평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가들이 발견하여 제시했던 인간평등의 개념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를 더욱 키워가야 한다.

현재 우리는 다종교(多宗教) 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각각 다른 세계관을 모두 포용하고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신조나 사상의 차이를 떠나서 동학의 원래 정신을 각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인간존엄성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재 우리는 1894년 혁명을 일으켰던 동학인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동학의 교리체계를 계승하여 거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종교 사회인인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동학의 교리체계를 계승하기 보다는 그 초기 사상에서 지향했던 중심 가치인 인간의 기본권 내지 평등권을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 이 계승작업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에 21세기의 새로운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농민적 건강성의 계승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은 농민이다. 1894년 당시 우리나라는 전근대(前近代) 단계의 사회였다. 농업 이외의 산업이 미미했고, 서비스업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당시 사회에서 아마도 전체 인구의 90% 이상은 농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들 농민 가운데 상당수는 양인에서 양반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신분 상승을 이룩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의 신분이 양반으로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위세(social prestige)에 있어서는 여전히 농민이며 피지배 대중의 처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은 오늘의 민중이란 용어에 더 접근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민중인 당시의 농민 가운데는 즉자적(卽自的) 존재로서의 피지배계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각하며 개선해 보려던 대자적(對自的) 존재인 민중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각성한 농민들은 민중으로의 파악이 가능한 존재들이라고 생각된다.

농민들은 오랫동안 일종의 봉건적 피지배와 제국주의적 침탈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19세기 60년대의 투쟁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했던 사람들이었다.

과거 16세기 임진왜란 때 나라의 주역으로 자각했던 사족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향촌 도처에서 의병운동을 일으킨 바 있었다. 물론 16세기의 의병투쟁에도 농민들은 다수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의병 참여는 상전(上典)이었던 사족들의 주도 아래 하전(下典)이었던 농민의 참여였고, 전근대적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60년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임술농민운동 때의 농민들은 임진왜란 의병투쟁에 참여했던 농민들과는 또 다른 존재였다. 그들은 전통적 지주(地主)나 요호부민(饒戶富民)에 대치되던 존재로서 경제투쟁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각성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정치투쟁이나 사상투쟁적 측면에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의 저항은 동학농민혁명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으며 그들의 봉기에 자극을 줄 수는 있었지만, 행동의 직접적 모델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임진왜란 이후 거의 300년이 흘러서, 그리고 임술농민항쟁 이후 30여년이 지나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에 직접 참가한 농민들은 더 이상 300년 전의 하전이 아니었고, 30년 전의 농민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은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만한 단계로까지 성장해 갔다. 이제 그들은 자각한 농민으로서 민중적 특성을 드러내며 반침략의 기치를 들 수 있게 되었다.

임진왜란의 의병투쟁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 누구도 신분의 해방이나 봉건적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의병투쟁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당시의 사족들은 근왕주의(勤王主義)를 표방하며, 조선이라는 신분제 국가의 보전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의병에 참여했던 농민들도 지도층의 이러한 판단에 이의가 없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의병투쟁의 과실(果實)은 농민이 아닌 사족들에게 집중되었다.

반면에 동학농민혁명 단계의 참여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반외세를 주장하면서도 근왕주

의적 기치를 답습하고 있던 한말(韓末) 의병과도 달랐다. 동학의 농민들은 반외세와 더불어 반봉건의 가치를 깨달았던 이들이었다. 물론 오늘날 학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 자체를 부정하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던 제한성을 부각시켜 농민들의 혁명성이나 사회개혁적 움직임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통적 민란/농민반란 내지는 민중봉기 정도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1894년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오인 내지는 몰이해의 결과였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의 농민들은 분명 사회혁명의 의지를 도처에서 표출하고 있었다. 이 의지의 표출을 통해서 그들은 자주적이고 평등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제 그들은 비록 그 봉기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임진왜란의 의병과는 달리 사건의 주체였다. 그러므로 사건이 일단 종료된 다음에도 그들의 주장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조선사회의 개혁을 위해 실천되어 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학농민군들에게서 드러나는 역사적 건강성을 확인하게 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에게서 추출되는 사회사상은 당시 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더 큰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던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들은 지배층으로부터 농투성이요 무지렁이로 취급받아 왔었다. 그러나 그들은 평등을 지향하던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고, 제국주의 침략의 실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해나갔다. 그 농민들은 매우 건강한 사고와 판단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혁명으로 규정될 수만은 없다.

오늘의 사회는 19세기 말엽의 사회와 판이하게 다르다. 역사에는 반복이 없으므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와 같은 사회는 결코 되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의 사회는 오늘의 과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민중들에게서 발견되는 역사적 판단의 건강성을 잊을 수 없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농민의 존재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에서는 역사의 주체요 발전의 동력인 민중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이 민중적 속성을 가진 존재였다면, 오늘의 민중들도 동학농민혁명자들이 가지고 있던 건강한 상황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의 민중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자각하면서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건강한 존재들이다.

오늘의 민중이 지향하는 바는 동학농민혁명자들이 결코 동일할 수는 없다. 사건이 전개되는 시대적 조건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민중들은 동학농민혁명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게 마련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2주갑 이전의 혁명자들과 같은 말을 하는 동어반복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오늘의 사람들은 오늘의 과제를 오늘의 말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이 과거의 반복이나 모방이 아닌 창조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오늘의 우리들도 동학농민혁명에서 표출되었던 농민적 건강성의 현대적 의미와 그 계승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그들이 지향했던 사회개혁과 신분해방이란 과제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환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인류애와 인간존엄성의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드러나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드러났던 농민적 건강성은 이제 오늘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인류애의 지향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3. 혁명적 실천력의 계승

혁명은 이상(理想, idea)과 물리력(物理力, power)의 결합이다. 동학농민혁명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물리력이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자들은 이 둘

의 결합을 통해서 사회변혁을 이루고, 조선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들이었다.

혁명은 분명 급격한 사회변동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물리력을 수반한 혁명이 없이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을 논할 때에는 물리력/폭력은 없어졌지만, 이상(理想)만은 아직도 빛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려던 그 혁명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발전을 향한 투신과 실천력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의 사회는 물리력의 수반 없는 변화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에 뒤이은 정보혁명도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변동이며, 그 변동의 과급력은 과거 어떠한 사건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자들이 처해 있던 사회적 조건은 오늘날과는 분명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투신을 통해서 확인되는 역사적 실천력만은 아직도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가 그 당시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창조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범을 보여주었던 자기투신과 실천력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물리력이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역사의 발전을 위한 동학농민혁명자들의 실천력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역사는 방관자에게 발전의 길을 갈아주지는 않는다. 역사는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발전되어 나간다.

물론 이 의식적 노력이 '무위이화'(無爲而化)를 주장했던 동학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위이화는 의식적 노력을 부정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체질화된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론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역사발전을 위한 실천력이 체질화되어 무위이화하게 된다면, 역사발전의 질과 폭은 더욱 고상하고 넓어 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혁명적 실천력은 우리 세대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혁명적 실천력의 계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나가는 말

역사는 흐른다. 역사의 시간이 흐를 때, 그 흐름의 결을 잡아 발전의 방향으로 이끄는 일은 역사학자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요청된다. 첫째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현재의 과제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동학과 농민과 혁명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인 인간존엄성/인권에 대한 관심의 강화가 요청된다. 정확한 시대에 대한 이해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류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의 마련을 생각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2주년을 기념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끝)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성주현/경기대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제정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두 갑자가 되는 120년도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위한 선양사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선양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현창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양(宣揚)의 사전적 의미는 '널리 떨치게 함'이며, 현창(顯彰)은 '환히 나타냄'이다. 이를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알리고 환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선양사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주관하는 기관은 '국가보훈처'이다. 때문에 보훈처의 핵심적 사업은 보훈사업과 선양사업으로 구분된다. 국가보훈처의 선양사업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애국애족정신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현창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고 명예로운 국민정신을 고양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직접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이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기억으로 전승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재창출하는데 있다.

그리고 공훈선양정책의 지향점은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것으로서 바른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지난날 민족정기가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정신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선양사업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등 수행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추도사업과 기념사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각종 기념사업회의 선양사업은 대부분의 추도사업과 기념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홍성덕 선생이 발표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전략>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토론자 역시 이 틀에서 몇 가지 논의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사업을 위한 과제나 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양사업은 추도사업과 기념사업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추도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추도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과 추도공간의 확보이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은 참여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다. 지난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불완전한 명예회복이다. 때문에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서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 상당히 인색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혁명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반국가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은 점차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역사적 복권이 시도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는 복권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참여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인 국가유공자로서의 서훈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1895년 전개된 의병투쟁을 기점으로 서훈을 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훈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1960년대 초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과 같이 민족사적 의미에서 평가받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훈의 기점을 동학농민혁명이 아니라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의 서훈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은 동학농민혁명을 ‘반란’이라는 전근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학농민혁명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의병, 독립운동 등 민족운동 전반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서훈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모시설의 확보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추모시설로는 공주의 홍천의 동학혁명위령탑 등이 있지만 이들 위령탑은 부분적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위한 추모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한 것은 최근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모시설 공간 즉 ‘희생자 묘역’을 마련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10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공간 조성 기초연구’를 가진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투현장에 대한 발굴 작업을 통해 유골을 수습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전국적인 추모행사를 가짐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두 번째로 기념사업이다. 대부분의 선양사업은 기념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도 기념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정읍시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조례를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동학농민혁명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제작
7.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정읍시의 경우, 조례가 조례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선양을 위한 기념사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읍시는 조례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는 지난해 첫 수상자는 냈지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최대의 문화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황토현동학축제’를 올해로 45회째를 맞고 있다. 또한 연구사업으로 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여 학술지로서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를 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동학농민혁명 선양을 위한 사업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선양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의 위상 재정립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첫 기포를 올린 고부기포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인 ‘반봉건 반외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최근 무장기포설이 대두되면서 고부기포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이 약화되었지만 고부기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학농민혁명에서 정읍이 갖는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다. 기념일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일이 가지는 상징성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학술발표회를 비롯하여 공청회, 나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지역적으로 또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갈등으로 그 기회를 번번이 살려 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기준으로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전국성, 현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읍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호국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의령군은 관민의 일치된 의사를 통해 ‘의병의 날’을 마침내 제정한 바 있다. 의령군은 임진왜란 당시 광재우 장군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의병의 날’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군민과 출향인사 등의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을 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의병의 날’ 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여론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국 규모의 여론조사, 대정부 건의문 등을 추진하였고, 국회 청원심사, 정부의 담당부서 지정, 타당성 용역, 공청회 등과 국회 및 정부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2010년 5월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의병의 최초 발상지인 의령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살린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정읍시의 경우, 이와는 다르겠지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하다고 본다.

셋째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을 위한 기념관 내지 박물관의 건립이다. 현재 정읍시는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시적인 기념공원으로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선양을 하는데 분명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박물관의 기능은 ‘에듀인포테인먼트(eduinfortainment)’라 할 수 있다. 에듀인포테인먼트의 의미는 평생교육(education)과 정보교류(information), 그리고 위락제공(entertainment)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조어로서 박물관의 주요한 목적 활동의 하나이다. 즉 박물관은 교육, 정보, 위락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와 유물, 정보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다목적 다차원의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의 환경을 개선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내지 박물관 건립은 기념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유적지 조사발굴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다. 그러나 정읍은 발상지에만 머물지 않고 최초의 전투지이며 승전지인 황토현, 동학농민군의 혁명군으로 대오를 갖춘 백산(현재는 부안군), 그리고 동학농민군 최고의 지도자인 전봉준을 비롯하여 손화중과 김개남, 만석보, 훈련장소 등 적지 않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 산재해 있다. 이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발굴조사를 집대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메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상을 제정하는 것도 학술연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단일주제로 한 연구는 가장 많다고 하지만 근래 들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학술연구는 점차 관심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에는 붓물 터지듯이 학술연구가 쏟아졌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맥이 끊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동학농민혁명학술상’ 제정을 권하고 싶다.

다섯째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정읍의 경우 다양한 문화콘텐츠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가장 상징적인 요소이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답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정읍’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읍은 동학

농민혁명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요소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이미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수원의 경우 '화성'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화성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아니라 정조와 관련된 뮤지컬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문학과 관련한 '수원학'을 정립하고 있다. 제주도도 '김만덕'을 통해 드라마, 만덕상,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는데 지원하였거나 앞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읍도 '황토현'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창작하는 등 역사성과 정체성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여섯째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선두 주자로서 조정자 역할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의 역사는 정읍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은 정읍은 독립적 지위에서 기념행사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각 지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이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읍시의 기념행사는 독립적 지위에 편승하여 여타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정읍에서의 기념행사는 전국성을 위해서라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인식은 예전에 비해 급진전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기념행사를 꾸며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문

유대수 : 지역문화정책연구소 (사)문화연구창 대표

토론에 앞서

‘동백’이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성대하게 열린 잔치의 한 복판에 있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치른 공연과 기념식, 전북예술회관을 가득 채웠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전. 필자는 전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공연장에 사용된 대형걸개그림 제작과 민족해방운동사 동학편 재현에 참여했다. 그 만남의 인연으로 지역 미술운동단체가 합쳐 설립한 전북민미협이 일원이 되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니 문득 옛 생각이 났다. 그 때, 시청 건물을 뒤덮을 듯 웅장했던 그 걸개그림들은 어디 갔을까? 황토현전적지를 걸을 때 모듬별 선두에 섰던 김개남, 전봉준의 초상들은 어디 있을까? 공연들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전에 출품되었던, 젊은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던 예술혼 서린 대작들은 어디서 잠자고 있을까? 18년을 훌쩍 보낸 지금, 작가들조차도 생활과 같은 작품 관리가 쉽지 않다.

1994년 동학 100주년 기념전에 출품한 그림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제목은 “상주성도-민들레” 원작은 어떤놈이 훔쳐가고 사진만 남아 상주동학 관련 자료집표지, 포스터등에 실리기도 합니다.

<http://cafe.daum.net/gong-gum/JAqN/21?docid=1KbPzJAqN2120101003173510>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업하기’ 전에 문화적으로 사업하기

장세길님의 글에 의견을 덧붙이기 전, 앞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동학과, 정읍과, 문화예술을 연결하기 위한 고민의 바탕에 “문화사업”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말하고자 함이다. 역사의 진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은 ‘기록’과 엇갈리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떠나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20여 년 어림의 시간 속에 쌓인 진실과 사실들, 기억과 기록들이 어딘가에 ‘문화적인 방법으로’ 정리되고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연구와 쟁투로 글 자료는 넘치게 많은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1968년 4월 이후, 수없이 개최된 기념사업과 문화축제의 이미지 기록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을까? 어디 있을까? 사라진 것들도 많을 텐데. 이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존재하지만, 그에 더하여 좀 더 풍부한 아카이브가 쌓이는, 발제자의 말마따나 세계 혁명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모이는 라키비움¹⁾, 응집처가 ‘정읍’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토론과 제언

가능성과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섬세함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단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카테고리만이 아니더라도 역사, 문화, 장소에 대한 기념 방식과 행사 방식의 단선적 접근과 일회적 태도에 대한 회의를 표하고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 사회 일반에 넘쳐난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의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방식과 제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요약하면, 동학에서 혁명으로, 지역에서 국제로, 특정일에서 상설로, 기념에서 일상으로, 황토현에서 정읍으로, 사건에서 인물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관행적인 수직적 모뉴먼트-기념 방식의 경우 순환되는 수평적 일상으로 되돌릴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1.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행사 현황에서 언급한, “공연을 제외한 예술 장르는 뚜렷한 활동 없음”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학농민혁명의 ‘시각화²⁾’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상설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은 대개의 ‘박물관’ 형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시각예술 분야 비엔날레 형태 또는 오픈스페이스에 설치되는 예술공원 형태를 상정한다.

1) Larchiveum, Library+Archives+Museum을 결합한 개념, Megan Winget 텍사스대 교수, 2008

2) ‘시각화’는 미술작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사진, 영상을 당연히 포함하며 모뉴먼트는 물론 텍스트, 행위, 연구저술들까지도 포함한다.

2. 발제자의 제안대로 정읍이 혁명사의 집적지가 될 수 있을지 자신하긴 어렵다. 그러나 시도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일단은 전국적 이슈화를 통해 점진적인 국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차별화를 염두에 둔다면, 과거의 재현보다는 당대의, 지금 여기의 사고와 관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적 계승’, ‘현실의 실천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문제는 ‘공간화’와 ‘시각화’에서 풀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 싶다. 방법적으로는 시각화 제시를 통해 스스로 공간이 조성되는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가칭)혁명예술의 숲’이 그와 같을 것이다.
3. 한국사회 현실에서, 비록 예시이긴 하지만, 정읍이라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FTA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개최>가 가능한가? 역시 문제는 ‘공간’이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공간이 제시되면 사람들은 그 공간을 사용한다. 공간 안에서 논다. 정읍시가 예술적인 역사생태공원-지역 통째로 박물관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면, 전국농민회가 ‘세계농민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4. 록페스티벌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제안이다. 하지만 인천의 펜타포드 경우, 재정적 문제와 여러 조건 속에 악전고투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여기서 문제는 국비 확보인데, 현존하는 록페스티벌들 속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동종 행사에 국비 지원이 원활할까 하는 우려가 든다.
5. 상설 브랜드공연 경우, 콘텐츠에는 찬성하나 덧붙일 게 있다. 역시 ‘공간’인데 현재의 정읍사예술회관으로는 벅차다는 생각이다. 객석 규모는 맞춤하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논의에 따라 별도의 상설공연장을 건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혁명예술의 숲’과 함께 하는 공연장으로 말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저운 규모의 노천극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 지역 활성화 콘텐츠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발제자의 제안처럼 문광부 및 전북도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전북도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읍을 거쳐 가도록 연계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7. 혁명미술관 건립 제안이야 필자 스스로 미술가 출신인 탓에 적극 환영한다. 정읍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위치 선점과 가치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서두에 언급한 집적, 보존, 관리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집적, 보존, 관리되지 않고 가공, 연출은 불가능하고, 생산과 유통-소통은 난감한 과제가 된다. 새로운, 창조적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지난 발걸음을 되짚고 거뒀들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리하면, 정읍의 자연-생태 환경과 함께 펼쳐지는 열린 공간 조성, 아카이브의 집적(기존 자료에 더하여 특히 시각조형화 부분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세계 혁명사, 민중사, 예술행위와 결과물들의 축제-장터 기획이라는 단계적 흐름이 될 것이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관광브랜드 개발전략】에 대한 토론문

정명희(전북발전연구원)

“동학”은 정읍시의 역사문화자원이면서 동시에 지역브랜드로써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관광전략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관광브랜드 개발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술상의 차이일 수 있으나 동학브랜드, 녹두브랜드, 인본브랜드 등이 혼재되어 제시되고 있어, 정읍시의 지역브랜드와 관광브랜드 그리고 동학브랜드의 위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관광브랜드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이 이런 혼돈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다크투어리즘이라는 틀에서 광주 또는 제주의 사례와 함께 너무 쉽게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동학을 관광전략으로 연계시키면서 어떠한 점에 착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월길이나 제주 4·3 평화공원 역시 역사적인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동학은 정신사적 맥락, 신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민중종교로 평가되고 있는 점에서 관광브랜딩 전략은 이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동학”이라는 네이밍으로는 관광활동과 연계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불교가 “마음인문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마음치유” 힐링시설을 건립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셋째, 동학을 관광자원화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공간과 체험이 필요한데 학습적, 교훈적 테마와 함께 “흥미”와 “재미”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될 필요가 있다. 종교문화의 부문으로 보면 동학 역시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공간과 동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장날”과 “장터” 활용방안을 세부 사업으로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넷째, 동학의 브랜딩이나 관광자원화에 대한 시도는 정읍시만의 이슈로 가져가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주변지역 고창, 부안 또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동학관광벨트를 추진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관광진흥전략

최종렬(전주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관련 중·단기 5개년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관광분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계획 구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책 아이템이 많고, 다소 백화점식의 정책개발이 되고 있으며, 기존 관광 정책이나 인프라 조성 사업에 동학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전략이 다소 미약한 감이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I. 보완 내지는 개선 희망 사항

1. 정책 아이템 중심으로 제시하다 보니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연차별 사업 실행 프로세싱이 보이지 않음
2. 동학은 그동안 유적지 발굴 및 시설 투자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왔지만 주로 하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왔으며, 소프트 측면은 간과해 온 나머지 지역 간 갈등 구조로 인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미흡, 전국화, 세계화의 구심점 약화로 지금은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음
3. 관광산업은 비즈니스의 종착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즉 관광산업의 육성은 관광 비즈니스가 사업의 목표이며, 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문화자산 가치를 증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4.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접근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차별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재원의 중복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
5. 그동안의 시설 투자에 비하여 소프트웨어의 부족, 비즈니스 기획 인력의 부족으로 문화자산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지역의 한계

성을 노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6. 따라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II.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

1. 탈정치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동학 테마는 전라북도의 새만금 만큼이나 정치적 입지자들의 득표 전략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는데, 금번 시장님은 동학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 다르다고는 보고 있지만 정읍에서 선거철마다 공약사업을 내세우지만 정작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학이 정치적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읍의 백년대계임

2. 탈지역화가 또한 필요하다. 이제는 동학을 정읍시민의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08년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동학하면 정읍시를 연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동학은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으로 그 가치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자체간의 갈등에서 탈피하여 지역 간 네트워킹과 이를 기본으로 하는 전국화, 그리고 세계화의 목표를 위해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 해 나갈 때이다. 그래서 금번 계획에서도 광역화는 중기사업으로 세계화는 장기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 체계로 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사업화가 필요하다. 먼저 세계화 추진을 위한 World Forum으로 코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3. 지역 인력 중심, 역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자산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은 가능한 조

력자 역할을 하고 중앙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사학자들이 인문학적 토대를 구축해 놓았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합 차원의 발전 전략을 논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실행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Ⅲ. 관광산업 정책 아이템 발굴

1. 모든 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공사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관광분야에서 첫 번째 성공 사례는 국내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만들어 연간 10만명 정도를 유치하는데 단기적은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유치하게 되면 내장산 리조트 등 숙박 시설이 해결되고, 음식도 동학에 맞게 특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녹두”를 테마로 한 음식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판매도 해봤지만 분위기가 썰렁한데, 녹두 음식에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정음에 오면 한우를 먹게 되는 것이다.

2. 외적으로는 중국 관광을 열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제주도에 국한하여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쉽지 않지만 남경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고위 공무원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이르기 까지 전략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논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5개년 계획이니까 1년차에는 기본부터 5년후에 세계화하자는 정책은 5년후에 마찬가지로 반복도리 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이미 세계화의 초석은 2008년 남경시 방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3년이 흘렀는데, 남은 것은 무엇인가?

3. 세계적인 포럼을 가능한 빨리 개최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9년에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동학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람이 반대해서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지 못했다. 그 때 필요했던 사업비가 1억도

안되었으니까 국가 사업이 아닌 시비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Right Now" 지금 바로가 중요하다. 이것 저것 다 계산하다가 가는 출발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4. 이때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 “인본”은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세계화 할 수 있는 컨셉이 될 수 있다. “개혁”과 관련한 단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청소년들이 오고, 중국 관광객들이 오고, 세계적인 포럼을 통해 동학의 정신적 가치가 인정받을 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문화콘텐츠적 접근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연쇄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때는 문학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연극으로,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주제를 삼을 것이며 그때 대중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자산 가치는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며, 정읍과 고창의 문화 역사적 자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이야 말로 진정한 동학농민혁명의 관광 고객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물결이 메가트렌드로 일어날 때 진정한 동학의 자산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토론에서 작고 실천 가능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기점으로 실천적 가치들을 만들어 준다면 3년 사업이 될 수 있고, 이를 비즈니스로 확대시킬 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5년 사업이 될 것이다. 동학 브랜드 이미지를 인본으로 할 것인가? 인권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정하지 말고 세계 포럼에서 논하자. 그리고 오늘은 세계 포럼을 할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며 국고만 쳐다만 볼 것인가 아니면 시장님이 시비로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선언하게 할 것인가? 다양한 실천적 대안이 오늘 현장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7. 종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커져가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문화, 관광 콘텐츠로 승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